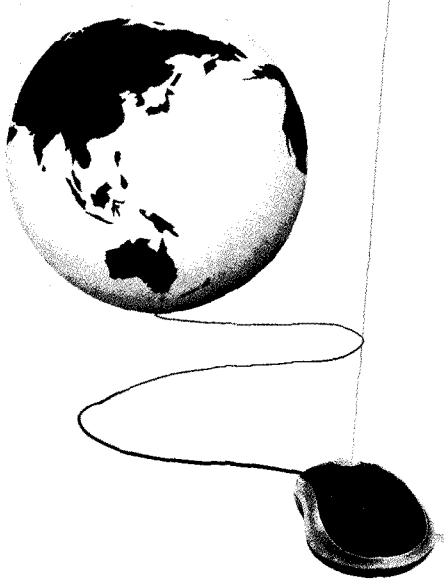
Field Voice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올해는 참가자 대폭 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 최다 인원인 400명이 넘는 실무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 전력회사, 공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한 점이다.

정부에서도 처음으로 기술기준세미나에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낸 것은 행사의 무게감을 더해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그리드 열풍이 불면서 전력계통 연계 등과 관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정 동향을 알아보려는 것도 산업계 관계자의 참가가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주제로 전력산업의 동향과 관련 기술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IGCC,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야

석탄은 석유에 비해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앞다투어 청정석탄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석탄 가스화복합발전(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 방식과 달리 석탄을 '가스화' 한 뒤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사이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정부도 '2012년 이후 수명이 다하는 기존 화력발전소를 모두 IGCC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최근 한국전력은 '뉴비전 2020'을 선포해서 2012년까지 300MW급 IGCC(석탄가스화복화발전) 플랜트를 완공하고, 2년의 시운전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유가와 함께 에너지 안보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은 매력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꿈의 기술을 현실화하는데 막대한 기술개발비용과 건설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청정석탄기술 연구에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청정석탄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최근 IGCC 플랜트 건설을 유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개발비용을 비롯해 건설비용이 날로 상승해 예상 비용이 약 1조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와 한전은 IGCC에 대한 수많은 리스크를 '장미빛'으로 포장하며 '석탄의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는 환상에 잡혀 2017년까지 IGCC 개발에 총 1조54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금 당장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며, 계획일 뿐이라고 또한 그 계획은 수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IGCC에 대해 우리가 너무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해외 석탄 활용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청정석탄기술 육성 방안을 차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조달청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동상표를 지정하고, 야심 차게 사업을 준비했던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은 제도 자체에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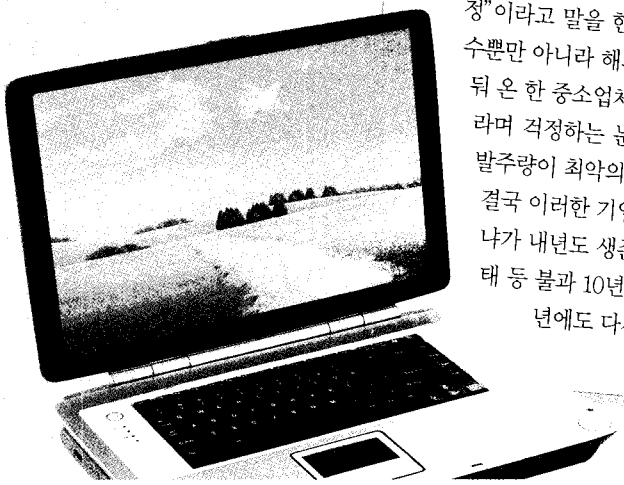
이 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 · 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조달청이 정한 기술 · 품질인증 보유비율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된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한 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사업에 차질을 빚어오던 조합 및 소기업 관계자들은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

전기조합 및 조합원사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NET, NEP 등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기조합 관계자는 "현 제도 하에서 신기술인증 업체들은 신기술인증제도만으로도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굳이 공동상표 제도를 이용하려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제도상의 보완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신기술인증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해 가면서, 일정 제품의 경우엔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상표 제도는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조합에게 있어 제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이루도록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조합 및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다.

#2

올해 예상과는 달리 경기가 회복세에 돌아섰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찬바람이 거세다.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IT 등 주력 산업들의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전망세는 좋아졌지만, 전통산업인 전력산업 부분은 아직 어둡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변압기 생산업체인 국내 중견기업의 모 대표이사는 "올 해도 쉽지 않았지만, 내년도가 더 걱정"이라고 말을 한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망치와는 상당히 다른 견해다. 즉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올 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수출에 비중을 둬 온 한 중소업체 대표이사도 "내년도 수출의 경우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걱정하는 눈치다. 내수는 내년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발주량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동안 위기 대응 능력을 얼마나 탄탄히 해 놓았느냐가 내년도 생존을 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IMF 외환위기 상황, 국제 금융 불안 사태 등 불과 10년 사이에 커다란 파고를 잇 따라 넘으면서도 생존해 온 국내 기업들이 내년에도 다시 한번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할 듯 하다.